

공동토론회

독일과 한국의 분단 경험과 사회통합의 전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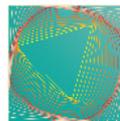
2015년 2월 4일
오후 5시-7시 30분

베를린 장벽박물관

마리아 노케박사, 옌스 휘트만 박사,
고유환 교수, 박순성 교수, 잉그리트 미테 교수, 이희영 교수

주최:

KOREA VERBAND



DONGGUK UNIVERSITY
SSK KOREAN DIVISION /
POST-DIVISION
RESEARCH GROUP

협찬:



GEDENKSTÄTTE BERLINER MAUER

BUNDESSTIFTUNG
AUFARBEITUNG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공동 토론회

독일과 한국의 분단 경험과 사회통합의 전망들

2015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지역으로 남아 있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는 남과 북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남한에는 약 2만 7천여 명의 북한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남한 사회의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주민들의 사회통합이 주요한 사회문제이다.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이 되는 현재, 평등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 동·서독 주민 사이의 내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즉 일상의 구조적 차이와, '머리 속의 장벽'이 극복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들이 두 사회의 분단경험에 대해서 반성하고, 현재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넘어서 남한과 북한 사회가 탈분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망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다. 토론회는 한국어-독일어 통역으로 진행된다.

- 순서 -

인사 및 장벽기념관의 사회적 의미: 마리아 노케 박사(베를린장벽박물관 부관장)

사회: 엔스휘트만 박사(구 동독 사회주의 독재청산을 위한 연방청)

발제:

- **고유환 교수(동국대):**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탈분단을 위한 전망
- **박순성 교수(동국대):**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하여
- **잉그리트 미테 교수(기센 대학):** 지배문화적인 과정으로서의 독일 통일: 출발, 과정 그리고 전망
- **이희영 교수(대구대):** 남한 사회로 온 북한 사람들: 차별과 인정의 경계들

마무리 인사: 한정화-나탈리(코리아협의회 대표)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탈분단을 위한 전망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1.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 원인

한반도에서 70여 년 동안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데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과 북의 대립갈등, 북한의 수령(지도자) 중심의 유일 체제 구축과 3대세습,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2개의 한국(The Two Koreas)'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분단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남북한의 두 개의 권력과 체제가 '적대적 의존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권력과 체제를 자기 권력과 체제로 흡수 또는 적화하려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남한의 역대 보수정부들이 권력투쟁론적으로 남북관계를 다루다보니 중앙정부가 대북정보를 독점하고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도 중앙집권적 통제권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남한정부의 정치군사 중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물질 토대도 크게 변화시키지 못 했다.

2.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의 좌절

진보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잠시 남북 화해협력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 합의인 2000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관계는 거의 모두 단절됐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에 공조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식량과 비료지원을 중단한 채 압박하면,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결국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북-중 경협을 확대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맞서며 대남 강경수위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통일·대북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지 못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선언, 작은 통로론 등을 내놓고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희망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체제통일(흡수통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우선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비

방·중상 중지, 특히 대북전단 살포중지 등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됨으로써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투자 기업과 남북 경협사업에 뛰어 들었던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매우 크다. 대북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남북관계 경색과 소모적인 대립갈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륙의 북방경제로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3.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최근의 노력

남북한 모두 지난 해(2014년)를 관계 복원의 적기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14년, 연초부터 남한은 ‘통일대박론’을, 북한은 ‘중대제안(상호비방·중상 중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핵재난 방지를 위한 상호조치)’을 내놓고 관계 복원을 모색했다. 하지만 2014년 남과 북은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비방·중상 중지 합의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 했다. 2014년 연말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렬되고 말았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다. 신년 벽두부터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 정상회담 개최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의 분위기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2015년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위급 회담(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단 고통해소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제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정상회담 제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화답함으로써 올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과 북미현안과 남북현안을 분리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4.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가능성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를 계기로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분단국가 정치권력의 속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상회담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추진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주장한 ‘분위기와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지, 제도통일(흡수통일) 배제, 대북전단 살포중단 등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북핵문제다. 북한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는다.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

다. 결국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어려울 것이다.

지나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때에도 북미 적대관계 해소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에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호응하여 1999년 가을 ‘페리 프로세스’를 가동하면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6자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합의가 이뤄지고 부시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중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의 경험에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해법과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하여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오늘 발표의 목표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2014년 2월에 제출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향후축약은 DPRK-COI Report)에 대한 비판적인 (그러나 결코 전면 부정이 아닌) 검토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유엔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한 결의안이 2014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아래에서는 네 개의 쟁점을 다루려고 한다.

첫째,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쟁점은 인권원리(Human Rights Principle)와 주권원리(National Sovereignty Principle)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인 쟁점인데,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DPRK-COI Report)에서는 조사위원회(DPRK-COI)가 주장하는 인권우선전략(a Rights up Front strategy)과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주권수호전략(strategy of safeguarding national sovereignty)의 대립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압박정책과 인권포용정책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 차원에서 인권침해를 근절시키고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원리가 당연히 모든 외교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권우선전략과 인권압박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두 개의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들(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A&B)이 제1조에서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국가들을 인권보호의 일차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인권원리와 주권원리의 현실적 균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치적 현실에서 인권우선전략이나 인권압박정책이 그 자체로, 또는 저절로 인권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인권정책의 핵심은 인권침해국가에서 인권이 실제로 개선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비판은 종종 국제 사회에서, 심지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와 '이중잣대(double standards)'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서 인권우선전략이나 인권압박정책은 '인권개선' 자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압박정책의 '부분' 내지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원리에 충실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구상할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된다.

둘째,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유 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또 단절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지만, 증언의 신빙성과 ‘합리적 근거’를 검증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탈북자의 증언 번복 사건에서 보듯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 증언에 대한 불충분한 검증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태와 관련한 공유인식의 기반이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보고나 평가로부터 곧바로 북한체제 자체를 ‘악마화’ 하거나 ‘예외화’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외부의 힘에 의한 체제 전환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에 나오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in the DPRK]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는 주장은 현실적인 정책대안의 모색 자체를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셋째, 북한 인권침해의 원인과 관련해서, 북한체제나 지도부의 성격 자체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관점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는 관점 사이에 충돌이 존재한다. 단기적으로 인권침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상처 치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법·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맥락을 파악하고 인권침해의 책임소재나 가해자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문화, 전체주의적 정치체제,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 등을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가 ‘정치체제의 필수요소(essential components of political system)’라고 지적함으로써, 인권침해가 체제 특수적(system-specific) 현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관련하여 양극단의 관점을 피하고 있지만, 세 가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먼저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상대화시키거나 북한체제의 내생적 변화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주의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체제 전환을 절대화하는 정치결정론에 빠지거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경시하게 될 수 있다. 끝으로 한반도 분단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이 충분히 지적되지 않고 있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

친 후 정전 상태에 머물면서,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지구적 차원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냉전체제 하에서는, 또는 적대적 대결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서는 체제 경쟁과 군비 경쟁이 필수불가결하다. 한반도 전체에서 작동하는 체제 경쟁과 군비 경쟁은 남북한 모두에서 국가주의, 안보중심주의,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지배 논리로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지배 논리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작용하였다. 다소 거칠게 말한다면,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억압체제는 동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체제의 작동원리를 고려한다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주의 국가나 실패 국가라는 북한의 국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을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관련한 평가에서도 쟁점이 존재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년 간 추구해왔다는 사실은 국제 공동체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The fact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has for decades pursued policies involving crimes that shock the conscience of humanity raises questions about the inadequacy of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압박은 그동안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인권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으며, 유엔인권기구에 국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개선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침해 국가에서 인권국가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중·장기적인 체제전환 과정, 특히 법·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문화의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정이라고 한다면, 압박을 통해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나 대응을 끌어내려는 노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적절한 정책방향의 설정, 대화·협력과 압박의 효과적인 조합, 상황 변화와 북한체제 대응에 맞춘 유연한 대응전략 선택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는 체계적이거나 일관적이지 못하다. 조사위원회는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하고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대화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권 인지도적 관점(a human rights perspective)’ 또는 ‘인권 기반 접근(a rights-based approach)’을 따르면서도 한반도 분단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절된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려는 정책이 한반도 분단체제 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북 인권정책이다.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지배문화적인 과정으로서의 독일 통일 :출발, 과정 그리고 전망

잉그리드 미테
기센 대학 교수

독일 통일은 구조적 차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동독과 서독 사이에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 해도 생활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고, 독일 경제는 안정적이며, 통일 독일의 민주주의는 튼튼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내부’ 통일의 문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양한 문제를 통해 동·서독이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독일 통일을 여전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차이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가?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차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런 질문의 답을 다음과 같은 주제로 소개하려 한다.

테제 1

동·서독의 차이는 서로 다른 사회화의 경험에서만 우선적으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통독 후와 통일과정의 경험에 의해서도 강한 영향을 받았다.

학술문서를 통해 현존하는 동·서독의 차이가 구 동독 사회화의 특색에서 유래한다는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집단적 교육, 민주주의적 구조에 대한 무경험,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특성들이 대체적인 해명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해명방식들은 동독의 생활현실에 대한 서독의 편견들을 드러낼 뿐, (동·서독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독일 통일 25년이 된 오늘 이러한 편견들을 극복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차이들은 부분적으로 신세대, 즉 구 동독 사회에서 사회화되지 않은 세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독 당시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동독의 제3세대>라는 단체를 설립한 것은, 이 세대에게도 자신의 근원과 (사회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동독에서의 경험이 구 동독인들에게 준 영향만큼이나 비슷하게, 통일전환기와 차후 통일과정에서의 경험들이 구 동독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동독인들은 통독전환기를 매우 다르게 경험하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통일이) 독재체제로부터의 해방이었던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깊이 동일시했던 국가의 붕괴가 곧 자신들의 삶의 전망과 신념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를 각자 어떻게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 - 이러한 경험은 각자의 생애사에 깊은 영

향을 미쳤다. - 하나의 정치·경제적 체제의 몰락을 체험해야 했던 것은 바로, 서독인들이 결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험에 대한 특별한 고찰방법이 초래된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경험은 거의 모두에게 인생과 직업에서의 급격한 방향전환을 요구하며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방향전환의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는 통일전환기를 경험한 각 세대의 연령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특히,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잠정적 규정의 하나로 은퇴를 하기에는 너무 젊은 사람들, 즉 중년층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다수가 -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이 - 이 과정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연루되었다던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논리로 볼 때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서독체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편입되었느냐는 문제와 상관없이 통일의 과정은 전적으로 지배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테제로 넘어가겠다.

테제 2

독일 통일의 과정은 처음부터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에 의해 이뤄졌으며 결국 지배문화의 정착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지배문화는 구 동독[인]의 관점에서 전체 독일의 규범을 받아 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은 애초부터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로 이뤄졌다. 통합은 동독을 서독에 일방적으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모든 서독의 규칙들이 성찰의 과정없이 동독에 일방적으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과정은 당시 서독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비판적으로 토론되어 오던 규정들(예를 들어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동독이 서독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 모든 삶의 분야에서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동독의 삶의 경험이 폄하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학교와 대학 졸업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직업 경험도 쓸모없게 되었다. 더구나 새로운 엘리트들이 대부분 서독에서 배출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동독 출신의 숫자는 현재까지도 미미하다.

이러한 통일과정은 무엇보다 동독의 삶의 경험을 폄하하는 공공의 분위기에 의해 조성되었다. 동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전이되었다(Abhe etc. 2009). 한 연구는 항상 동독인들이 대중매체에서 '타자'로 보도될 뿐, 동등하게 보도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Wedl 2009:130).

1989년 이후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있었던 현상들은 '지배문화'라는 개념 (Rommelsbacher, 1995)으로 설명될 수 있다. 비르기트 로멜스바허(Birgit Rommelsbacher)에 의하면, 지배문화란 우리의 모든 생활양식, 자기해석, 그리고 타자에 의해 제시되는 이미지들이 상위질서와 하위질서라는 범주들로 이해된다. 문화는 "공통으로 전유되는 의미들의 앙상블"이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며, 여기에는 "그 사회의 현재 상태, 특히 경제적, 정

치적 구조, 그리고 그 사회의 역사가 표현된다. 문화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 견해 그리고 감정을 결정한다.”

또한 로멜스바허에 의하면 이 문화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 지배권력의 다양한 전통” 및 이와 연관된 상·하위 질서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사회의 권력관계는 사고와 감정, 무의식 및 행동규칙에 기입되었다. 로멜스바허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억압, 규정과 금지에 기초하는 지배권력과 달리, 지배[문화]는 포괄적인 동의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지배[문화]>가 사회구조와 인간에게 내면화된 규범을 통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위계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사이의 단순한 차이(수평적 차원) 뿐만 아니라, 권력의 격차(수직적 차원)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차원을 언급하는 것은, 차이의 평등화를 위한 노력인 반면 수직적 차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방해한다. 그 결과 비-지배적 집단은 침묵하게 된다. 구 동독의 역사와 경험은 개인의 식탁에서만 거론될 뿐 사회적으로는 더이상 토론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문화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는가?

테제 3

독일 통일과정의 권력 격차는 동독과 서독의 극심한 경제 격차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냉전의 이미지들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던 당시 양 국가는 40년이란 분단된 역사를 뒤로 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타자에 대한 이미지는 중립적이지 못했고, 냉전의 적대적 이미지와 서로에 대한 폄하 이미지들만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여기는민주주의- 저기는독재>라는 양극화된 사고가 고착되었다.

서로 다른 두 독일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이란 거의 없었다. 통일 과정에서 무엇보다 구 동독의 삶의 현실과 동독체제에 대한 분화된 인식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냉전의 이미지들만이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언론 분석에 관한 연구는 “독일의 분단시기로부터 유래된 정체성 경쟁이 서서히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 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Ahbe 2009:S.110).

냉전 논리에 의하면 독재체제 하에서는, 유지되어야 할 가치나 민주주의적인 서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건조직과 비분리 학교체제 등과 같은 동독의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 통일독일 사회가 전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또한 구 동독 주민들을 국가와 동일시하였다. 국가가 독재적이고, 첩보기관으로 조직되었으므로 사람들도 독재적 성향이 있고, 모두가 국가정보기관을 위해 일했다고 여겨졌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많은 실재적인 만남을 통해서야 이러한 이미지들이 머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교과서와 기념관에서는 구 동독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들이 잔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젊은 동독 출신의 세대들은 구 동독 사회와

그들의 부모들을 잔존하는 이미지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개인은 국가와 동일하지 않으며, 독재적인 시스템에서도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들을 찾아낼 수 있다. 통일과정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재의 영향을 받은 사회의 다층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적한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통일과정이 성공적이라고 본다.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인 출발점을 뒤돌아보면 지난 25년간 쌓아 올린 실적들이 불가사의 할 정도다.

다만 문화적인, 정서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내부’ 통합은 동등한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동독과 서독 사이의 현실적이고 수직적인 서열의 존재를 지적하고 고려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내부’ 통합은 구 동독뿐만 아니라 독일의 양쪽 부분국가들의 과거청산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냉전의 스테레오 타입과 이미지들로부터의 결별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Ahbe, Thomas/ Gries, Rainer/ Schmale, Wolfgang(Hrsg.) (2009) Die Ostdeutschen in den Medien. Das Bild von den Anderen nach1990.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Ahbe, Thomas (2009) Die Ost-Diskurse alsStrukturen der Nobilitierung und Marginalisierung von Wissen. EineDiskursanalyse zur Konstruktion der Ostdeutschen in den westdeutschenMedien-Diskursen 1989/90 und 1995. In: Ahbe, Thomas/ Gries, Rainer/ Schmale,Wolfgang (Hrsg.) (2009) Die Ostdeutschen in den Medien. Das Bild von denAnderen nach 1990.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S. 59-112.

Rommelspacher, Birgit (1998): Dominanzkultur,Texte zu Fremdheit und Macht. Berlin: Orlanda.

Rommelspacher, Birgit (2002) Anerkennung undAusgrenzung. Deutschland als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Frankfurt/ New York:Campus.

Wedl, Julia (2009) Ein Ossi ist ein Ossi ist einOssi... Regeln der medialen Berichterstattung über ‚Ossis‘ und ‚Wessis‘ in derWochenzeitung Die Zeit seit Mitte der 1990er Jahre. In: Ahbe, Thomas/ Gries,Rainer/ Schmale, Wolfgang (Hrsg.) (2009) Die Ostdeutschen in den Medien. DasBild von den Anderen nach 1990. Leipzig: Leipziger Universitätsverlag, S.135-180.

남한 사회로 온 북한 사람들 : 차별과 인정의 경계들

이 희 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1. 도강자, 탈북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한국전쟁(1950-1953)을 거치며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실질적인 적대관계로 구성되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정상회담, 상호방문 외에 민간인들 사이의 접촉은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비법'으로 두만강을 건너오면서 시작되었다.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행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중국 국경을 넘어온 도강자들 중 다수는 중국에 살던 친인척으로부터 식량 등을 구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들의 도강 경험이 북한 사회 내 변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 둘째,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 주민들 중 다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략 20~30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여전히 중국 사회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따라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들의 중국 사회 내 지위는 불안정하다. 셋째,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체포되어 복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남한행을 선택한 북한 주민들도 있다. 2014년 말 현재 남한 사회에 공식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2만 7천여 명이다. 이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만남이 가능해졌다.

초기에 남한 사회로 온 탈북자들의 경우 식량난에 직면한 난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부터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북한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외부 사회에 대한 정보가 북한 사회 내에서 퍼지면서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즉 좀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 남한으로 '이주'해오는 북한 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2. 한반도의 '분단장치'와 남한 사회의 탈북자 지원정책

생존을 위해 중국 및 제3국을 거쳐 남한 사회로 오게 된 대량 탈북자들에 대해서 남한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발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 이하 탈북자 지원법>을 통해 이들을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호,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소한의 신분 검증절차를 거친 탈북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다양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탈북자 지원법은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의료지원과 주거 공간, 교육 및 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내용이 물질적 조건에 집중되어 있고, 정신적, 심리적 지원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재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금 수령의 전제 조건이 비현실적인 점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다른 이주자들에 대한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국적부여, 무상교육, 임대주택보증금 지원 등). 암묵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남한 사회를 선택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체제 우월성을 입증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와 같은 제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탈북자 지원법은 한반도 분단장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일상 속의 차이와 차별들

탈북자 지원법에 따라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냉전 질서와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탈북자들은 종종 ‘남한 내부의 적’이라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건 등이 생기면, 탈북자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문제의 당사자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스파이로 의심받게 된다.

둘째,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평가에 의해 노동 시장에서 차별 받고 있다. 특히 20~30대의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 노동시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경우 동일하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남한 출신, 조선족 출신 배경을 가진 노동자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소위 3등 시민이라는 말도 있다.

셋째, 반공주의와 소비적 능력주의가 암묵적으로 지배하는 남한 사회의 일상 속에서 남 북한 주민 사이의 구별짓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적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의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북한 출신임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출신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이웃, 친구, 연애, 결혼 등)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작동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외모의 차이가 없는 ‘드러나지 않는 이주자’로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문화적 위계 속에서 상식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어린 청소년으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북한주민들까지 남한 사회에서 자신을 실현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체감하는 삶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4. 유럽 등으로 (재)이주하는 ‘탈북 난민들’

최근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 중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이주의 배경으로는 2004년 미국이 제정

한 북한인권법과 UN 산하 북한인권위원회의 최근 활동 외에도 앞에서 밝힌 남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들 수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온’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의 차별을 피해,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04-2014년 사이의 10년 동안 약 4천여 명의 북한 국적을 가진 개인들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들 중 다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로 추정된다.

5. 마무리

남한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북한과 자본주의 남한 사회를 동시에 경험한 개인들로서 의미 있는 ‘사회적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적 적대와 정치적 갈등을 넘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매개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이해가 필요하다.

Short CVs:

Dr. Maria Nooke studied Religious Education and worked with church children and youth projects. She has been active in a church peace and environment group in East Germany and was Co-editor of the opposition paper "AUFBRUCH" from 1985.

From 1992 to 1997 she studied Sociology, Psychology and Pedagogy at TU Berlin. She was involved in contemporary projects on National Socialist and East German history. Since 1999 Dr. Maria Nooke is conducting scholarly and directorial responsibilities at the Berlin Wall Memorial and in 2007 she received her PhD degree at FU Berlin.

Dr. Maria Nooke is deputy director of the Berlin Wall Foundation and director of the Marienfelde Refugee Center Museum. Her areas of specialization surround Oral History and Biographical Research.

Dr. Jens Hüttmann studied Political Science, Sociology, History and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Leipzig from 1995-2001. From 2003-2005 he worked as an assistant lecturer at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Leipzig and from 2001-2007 as a member of the research staff of the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Wittenberg (HoF), University Halle-Wittenberg. He acquired his PhD at the University of Erfurt, Faculty of Philosophy, Grade: Dr. phil. with his topic on "History of scientific research on the GDR since 1949 in West-Germany". Until July 2009 Dr. Jens Hüttmann was head of the office „Peaceful revolution 20 years ago“ of the Federal Foundation for the Reappraisal of the SED Dictatorship, Berlin.

His main publications focus on coming to terms with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Germany, especially on the history of Scientific Research on the GDR.

He is now head of the Education Department of the Federal Foundation for the Reappraisal of the SED Dictatorship, Berlin.

Prof. Dr. Koh Yu-hwan received his BA, MA,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Dongguk University in South Korea and is now director and professor of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In 2012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His major academic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n studies, comparativ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h's specific research has covered questions concerning North Korean Politics, Ideology, Military and Inter-Korean Relations. His books include Understanding North Korea's Politics (2001), Introduction to North Korean Studies (2001), North Korea and Regional Security(2006) and The World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Cries and Whispers (2010).

Prof. Dr. Park Sun Song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Paris - X (Nanterre) in 1992. He was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outh Korea) from March 1993 to August 1997. He worked as the director at the Peace and Disarmament Center, PSPD and as the president at the Institute of Democracy and Policies, DUP.

Prof. Dr. Park Sun Song is now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is lecturing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n Economy and Unification Policies.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North Korean Economy, Unification Policy of the two Koreas, Inter-Korean Relations, Division System of Korean Peninsula and Actor-Network of Korean Division

Prof. Dr. Ingrid Miethe studied Pedagogy,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at TU Berlin. She receiv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at FU Berlin on the topic of “Women among the GDR opposition” and her habilitation at University of Halle-Wittenberg on “Education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GDR”. From 2000 until 2009 she worked as a professor on the subject of General Pedagogy at Protestant University of Darmstadt and since 2009 at University of Giessen.

Her main topics of research incorporate research on the GDR, History of Education, Education and Social Inequal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nsfer of Organizations, Qualitative Research, as well as Social Movements. Her current research project at the German Research Foundation deals with the topic “Globalization of an educational idea: Workers’ Faculties in Cuba, Mozambique and Vietnam”.

Prof. Dr. Yi Hee Yong studied Sociology at TU Berlin and received her PhD in Sociology at Kassel University in Germany in 2005, supported by the PhD scholarship program from the Hans-Boeckler Stiftung, Germany. From 2005 until 2007 she has worked as research professor at the Center for Culture and Information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in South Korea. She is now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Daegu University, South Korea, since 2007.

Her recent articles, such as “(Post)Division and Actor-Network of International Migration: Case Study on the Life and Human Rights of 'Traveling' North Korean Refugees” published in the North Korean Studies Review and qualitative research with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South Korea demonstrate her expertise on today's topic.

Her main interests focus on Social Minorities, Migration, Oral Life Histories and Actor-Network of Korean division.

주최:

동국대 SSK 분단/탈분단 연구단 소개글

동국대 SSK 분단/탈분단 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NRF)의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의 지원을 받아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탈분단의 사회동학>이라는 주제로 10년의 중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외에 9명의 연구자(북한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언론학, 여성학 등)가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은 정치와 안보 중심의 접근으로 규범화되어 있는 분단 연구에서 벗어나, 경험적이고 실천적 차원에서 분단/탈분단 연구의 이론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 현실에 대한 경험 연구를 통해 분단/탈분단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탈분단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코리아협의회

코리아협의회는 독일어권에서 활동하는 열려있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시민단체다. 코리아협의회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반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관심있고 함께 참여 혹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협력의 장이다. 코리아협의회는 독일의 ‘아시아재단(Asienstiftung)’과 ‘아시아하우스(Asienhaus)’의 창립멤버다.

코리아협의회는 인권 및 시민권리운동을 주요하게 다룬다. 경제, 언론, 정치, 노동단체, 종교, 환경, 여성운동,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독일 내, 유럽 내, 국제적인 범위의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